



지표로 보는 이슈

제82호 | 2017년 2월 10일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내영
www.nars.go.kr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맞이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견해, 재개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 75.9%의 응답자들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54.6%가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 조사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 개성공단의 역사성, 경제성 그리고 남북관계에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는 기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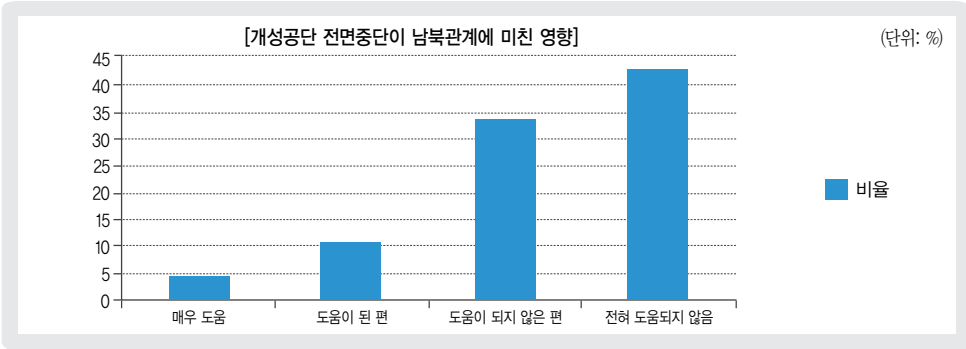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이슈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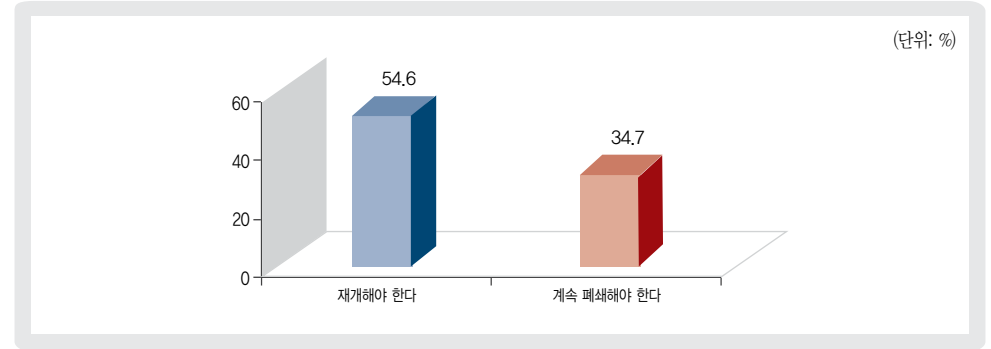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조사결과



주: 1)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크기는 총1030명, 표본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로 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하였음.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이고,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이며, 응답률은 16.7%이었음

자료: 한국갤럽,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2017.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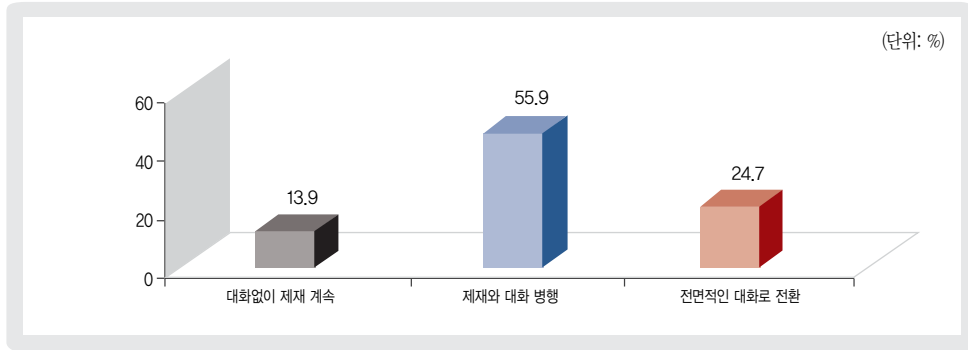
자료: 한국갤럽,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2017.

-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국갤럽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음. 한국갤럽은 2017년 1월 18~19일간 남북관계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크게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견해, 재개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남북관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국민 인식의 일단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조사결과 응답자중 33.6%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2.3%에 달했음. 즉 응답자 중 75.9%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박근혜정부 후반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강대강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화가 단절되어 대결·갈등형 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남북관계가 대화형일 때 한반도 평화가 견조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대결·갈등형일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논리의 연장에서 보면, “도발과 제재”라는 강대강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기 보다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음.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책을 재검토하는지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이 국면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임

- 개성공단을 재개하는데 대하여 전체 응답자중 54.6%가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7%는 전면중단의 지속을 지지하는 인식을 보여주었음
- 설문에 응한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연령, 지역, 이념적 성향에 따른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절반 이상의 다수응답자가 개성공단 재개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유일하게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개성공단 재개(38.8%)보다 전면중단의 지속(50.6%)이 높게 나왔음
- 한국 갤럽은 2016년에도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2016년과 2017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33%에서 75.9%로 증가하였음¹⁾

주: 1) 2016년 조사는 2016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연령, 성, 지지정당, 직업, 생활수준별 지표에 따른 응답자 특성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휴대전화 RDD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3.1%포인트였음. 조선닷컴, 2016년 2월 19일자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자료: 한국갤럽,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2017.

시사점

- 우리정부가 향후 추진해야할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재 의견이 13.9%,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55.9%, 그리고 전면적인 대화로의 전환이 24.7%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0.6%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전쟁기간에도 대화는 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연령, 권역, 이념에 따라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범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북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등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강경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설문문에 응한 사람들의 75.9%가 남북관계개선에 정부의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54.6%는 현재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의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음
 - 개성공단은 분단을 넘어 공단 종사자들 간에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미래의 통일을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전면중단'을 '부분중단'으로 전환하는 데서부터 남북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음
- 대북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할 수 없으며, 이란의 핵협상 사례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보임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